

“전남광주특별시, 수도권 일극체제 넘어서는 지방주도 성장 선도모델 될 것”

■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 왜 전남광주특별시장이 되려고 하나?

오랫동안 '소외와 낙후'의 프레임에 갇혀 있던 광주와 전남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대도약·대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특별시 출범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광역단위 통합이다보니, 출범 초기 6개월의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시민들의 일상에 혼란이 없도록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해 지역주도 성장을 이끌 첨단산업 유치 등 특별시의 큰 그림을 채워야 한다.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웅비할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 청사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 간 현안 조정, 도시·농촌 간 균형발전 등 숱한 난제가 쌓여 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다.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했던 분들, 별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통합을 맞은 사람들이 해낼 수는 없다. 통합시장 자리를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오랜 광역행정 경험과 정치력, 통합에 대한 비전을 가진 '준비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

저는 오랜 준비와 고심 끝에 통합을 설계·제안하고 끝내 이뤄낸 사람으로서, 통합의 완결을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며 봉사하곤 마음이 크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주도 성장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이루고 싶다. 전남광주시의 대도약·대부흥의 기록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써내려가고 싶다.

▲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핵심 과제는?

특히 전남광주특별시는 최초의 광역단위 통합으로 이전 사례가 없는 만큼, 시도민 일상에 혼란이 없도록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원시스템, 복지정책, 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및 서비스에 공백 없도록 당분간 기존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전남도·광주시의 다양하고 유익한 정책들은 통합 후 특별시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돼야 한다.

이런 사례로 전남의 경우 ▷출생기본소득(1~18세, 18년간, 월 20만원)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해외유학생 지원 등(2년간 총 1억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광주는 ▷청년구직활동수당(월 50만원) 생활밀착형 장년정책 50+종합채움(생애재설계, 일자리 지원) 등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20조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당장 내년도 예산작업부터 본격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27개 시군구가 특화산업 유치 등 미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필요한 만큼, 이를 활용한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통합 이후 전남광주특별시는 어떤 모습으로 거듭날지, 미래의 모습을 미리 그려본다면?

전남광주특별시가 인구 400만명의 대부흥 시대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지방주도 성장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

전남광주특별시는 보다 강력해진 재정과 분권을 통해 농어촌, 중소기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더욱 두텁게 지원하면서 모든 시도민들의 희망과 행복한 삶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통합 지원금 연간 5조, 4년간 20조 원 사용 계획은?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 차원의 단순 SOC 투자가 아닌 광주 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쓰여야 할 것이다.

통합의 가장 큰 주안점은 '산업 육성'에 있다. 산업·경제를 일으키고, 미래 일자리가 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도 필수적이다.

실제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의 예산도 실질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지치구만 못 받는 보통교부세를 지급해, 자치구의 재정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AI 영재학교, AI·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전 산업과 연계 육성해 지역 청년뿐만 아니라, 수도권 청년도 찾아오도록 하는 교육 여건 개선도 중요하다.

▲당선되면 주청사 소재지는 어디로 할 건가?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세 곳을 그대로 존치하고 균형 있게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사항이다. 사실 특별시가 출범하면 행정 기능은 더 커지고 따라서 3개의 청사는 업무도, 근무하는 인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정 청사로 기능이 통합해 하나의 청사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청사는 다만 기획, 인사 등 주된 기능을 갖고 주소지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들은 주청사가 어디냐에 중점을 두지만,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고, 특별시장도 어느 한 곳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다. 광주에 출근했다가 순천에 갈 수 있고, 무안에 가는 등 현장에서 업무를 하며 시민들을 만

재정 분배 등과 연계해 주청사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으며, 또한 주소지와 주거기능을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정부가 통합시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주청사나 의회 청사 위치에 맞춰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논의하고 집단지성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최근 수도권 진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특별시에 2차 공공기관 집중 배치'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셨다. 분산 배치보다는, 수도권과 먼 지역일수록 더욱 집중 배치 통해 지역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히셨다.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광주·전남 양 시도 뒤편으로



기 생태계 완성에 필요한 한국 지역난방공사와 말산회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마사회 등도 중요 유치 대상기관이다. 무안국제공항과 연계 가능한 한국항공공사를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도 필요

공기관을 이전·유치해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2030년까지 좋은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해 청년 등 특별시민이 서울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이 행복한' 특별시를 만들겠다. 2046년까지 인구 400만 명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

광주권·서부권·동부권·남부권 3+1축 4개 권역 중심 'Y4-노믹스' 비전 실현 농수산·에너지·AI·문화예술 등전략산업과 시너지 낼 핵심기관 10곳 유치

'민주화의 성지'에서 대한민국 경제 이끄는 '경제민주화 성지'로 도약 확산

라 확산한다. 잘 아시겠지만 통합의 목표는 양 시도의 저력을 모아, 산업을 일으키고, 우리 청년들이 고향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얻어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기회의 땅'을 만드는 것이다.

AI·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광주와 전남은 이제 대한민국의 첨단산업과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갈 '황금같은 기회'를 맞았다. 통합 이후,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용수라는 강점을 살려 반도체 산업 벨트를 형성하고, 연관 기업까지 불러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

산업 집적화를 통한 첨단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면 지역 인재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이에 맞춰 지역 대학도 함께 발전하며 선순환이 이뤄지는 청사진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통합으로 인해

특히 정부가 재정지원을 약속한 4년 이후에도 일정 규모의 재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구적 지원을 건의했다.

예컨대 통합으로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기회가 줄어들 수 있거나, 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교부세를 그대로 인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 정부가 TF를 빠르게 가동, 이를 개별법에 담은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중소기업, 농어민 등 각계각층의 어려운 부분 세심히 살피면서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신안, 곡성에서 시범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 추진하고 출생기본소득 같은 복지정책은 광주와 전남 양 지역이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야 한다. 출마자들이 통합 특별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정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주청사 문제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어 안타깝다.

아마도 광주에서는 전남도청이 이전하면서 구도심 공동화를 경험했고, 무안 낙안은 전남도청으로 인해 조성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도청 일부 기능이 사라지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부권에서는 경제 기여에 비해 행정적으로 소외됐다 목소리도 높다. 분명한 것은 주청사 문제를 떠나 현재의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는 그대로 유지되며, 기능은 더해지고 근무 인원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청사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높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제2차 이전, 20조 원

나주혁신도시에 두 배의 공공기관을 배치한 바 있다. 이번에는 '통합지역 집중 배치' 명분을 살려, 4배 이상은 받아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농협중앙회 같은 큰 기관은 반드시 우리 지역에 와야 한다. 광주는 문화의 중심이자 민주주의의 본산인 만큼 문화부가 광주에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큰 틀에서 바로 옆 동네는 우리 지역에 온 것이나 다름 없어 상상 정신을 발휘해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전남·광주 전체적으로 농수산·에너지·AI·문화예술 등 전략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핵심 기관 10곳을 비롯 총 40개 기관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우선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생명 분야 기관을 집중 유치하는 게 필요하다. AI·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에너지 전주

하다. 이들 기관이 오면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등의 추가 유치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규모 있는 공기업·공공기관'을 우리 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해 잘 대응해나갈 것이다.

▲주요 공약은? (광주와 전남 중서부권, 동부권 등 권역별 공약은?)

새롭게 시작하는 전남광주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자, 수도권 일극 체제를 뒤엎는 국가 미래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민주화의 성지'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경제 민주화'의 성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권·서부권·동부권·남부권 등 3+1축 4개 권역을 중심으로 'Y4-노믹스' 비전을 실현하겠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로봇·에너지·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과 함께 농수축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지역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광주권은 자율주행·AI 실증·반도체 패키징, 동부권은 로봇·우주항공·수소·고부가 가치 반도체, 서부권은 에너지·AI데이터센터·항공정비·반도체 팹, 남부권은 에너지·첨단 농수산업·헬스케어·관광 등으로 성장동력 기반을 다져 전남광주특별시 전역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첨단 산업 생태계가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농·수협 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

통합에 따른 지원금 20조 원을 마중물로, 산업기반을 닦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민원주택, 출생기본소득 등 강력한 인구 유입 및 정주 시책을 총동원하겠다.

'K-문화', 'K-콘텐츠'의 보고이자, 대한민국의 문화·관광수도로서의 위상도 더욱 확고히 하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광주 급남로 일대를 '예술복합단지'로 개발하고, 문화·역사·예술자원이 풍부한 목포, 나주, 여수, 광양, 순천 등 전남 5개 도시를 비롯한 '1+5 문화·관광수도 비전'을 실현하겠다.

철저한 분권을 통해, 특별시의 권한과 재정을 27개 시·군·구에 균형있게 배분하고, 주민자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K-자치 기획단'을 구성해 특별시민이 주인되는 '특별한' 특별시가 되도록 하겠다.

▲끝으로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광주·전남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이자 시도민의 뜻이다. 또한 도도한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다.

전남광주 통합을 가장 먼저 제안하고, 추진·실현한 사람이 바로 저 김영록이다. 고민도 가장 많이 했고 대비도 충실히 했다. 그렇다면 통합을 완결할 사담도 철저히 준비된 저 김영록일 수밖에 없다. 7월에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의 역사적 성공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도민, 아니 우리 특별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원하고, 광역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진 김영록! AI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유치에 이미 많은 성과를 낸데다 지역경제에 대한 제대대 비전을 가진 김영록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이자, 소통하는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방공사, 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



김영록 예비후보가 3+1축 4개권역 중심의 Y4-노믹스'로 전남광주특별시의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경진과정에서 이병호 후보와의 단일화로 연합을 이루는데 성공한 김영록 예비후보.